

문서번호 경제금융_2017-0201

수 신 유일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제 목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

날 짜 2016. 2. 7. (총 8 쪽)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

.....

1. 기획재정부는 2017.1.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학재의원 등 125인, 의안번호: 2000026, 이하 규제프리존법)이 규제완화에 따른 재벌대기업 특혜라는 우려와 관련하여 “규제특례는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와 관계없이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주요 지역전략산업인 신산업 분야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분야로, 규제완화는 이들 기업의 투자 촉진에 기여”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그러나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준비 중인 사업계획은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재벌대기업의 기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혹은 지원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의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게이트’ 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 제도와 실제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계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해 환경, 의료, 개인정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 질 의 -

1.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프리존법은 각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아래 규제프리존법 제93조 참고).

규제프리존법 제93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의 설치)

-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추진단의 운영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규제프리존법 제93조에서 언급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① 규제프리존법 제93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규제프리존의 운영 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시킬 수 있고 ②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상 전담기관은 재벌대기업이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계획 하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위와 같은 정황에 따라, 재벌대기업은 ①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개별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하나의 재벌대기업과 매칭되어 운영 중이고 ②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한 재벌대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1) 재벌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2)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 역시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재벌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

1) 삼성과 경상북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2015.3.26.)¹⁾에 따르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 융합형 신사업 발굴 ▲ 문화·농업 사업화 추진 등의 과제를 ‘삼성’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 출처: <http://cei.go.kr/policy/39/detail>

다. ▲ 삼성 등이 의료기기, 로봇, 영상진단, 금형, 센서, 탄소소재, 3D 콘텐츠 등과 같은 7대 유망분야 관련 신사업을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에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 경북과 삼성이 총 200억 원, 성장사다리펀드 총 100억 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업종전환을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표1> 참고).

<표1>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중 1기 7대 상생협력 신사업 과제 관련 내용

분야	대상기업	지원기관	내용	추진일정
의료기기	디알젬/루샘	삼성	이동식 X-Ray 장비 부품 국산화 기술 지원	'16.10월
다관절로봇	삼익THK	삼성	제품 조립 다관절 로봇 국산화 S/W 개발지원, 판매 지원	'16.3월
영상진단	메가젠	삼성	3차원 치과영상진단 솔루션의 삼성의료원 임상시험 및 판매 지원	'15.12월
금형	메인텍	삼성	금형제작 프로세스/기술 고도화, CAD/CAM 및 가공자동화시스템 기술지원	'16.1월
센서	월드정보	삼성	신속/정확한 센서 검측 기술지원, 판매 지원	'15.8월
탄소소재	신영	도레이	자동차 후드 및 범퍼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차기 사업 발굴 지원	'15.12월
3D콘텐츠	씨온	경북문화진흥원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 등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지원	'15.9월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스마트기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정(안)>(2016.6.)²⁾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 스마트융합 의료기기 허가 간소화 ▲ 원격의료 대상 확대 ▲ 스마트전장 IP주소 정보수집 사전동의 제도 개선(예외조항 신설) 등과 같은 규제폐지 내지는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상북도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마련한 사업계획 간의 유사성, 연관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네이버와 강원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2015.8.31.)³⁾에 따르면, “혁신센터·전담

2) 출처: <https://goo.gl/XO6c4g>



기업인 네이버·강원도가 협업하여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네이버의 창업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공개를 시작으로 고도의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포털’ 을 3단계로 나누어 구축”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 포털 구축 로드맵에 따라 연내 민관 공공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데이터 수집·분석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 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민관 공공데이터를 네이버에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표2>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중 네이버에 제공하는 민관 공공데이터 관련 내용

<p>지자체/국토부: 실시간 교통정보-버스도착 정보/지도 정보 등 문화부/행자부: 기관정보/관광지 정보 등 토탈 POI 정보 통계청: 통합 형태의 실시간 가격정보-부동산 및 물가정보 기상청/환경부: 통합된 형태의 환경 정보 : 날씨 및 환경 행자부/국토부/산자부: 실시간 상업 지구 변경 정보 : 상점 매출 정보 국세청: 산업별 세금 정보 등 심평원: 의료정보 : 지역별 진단 및 동향 정보 한전/환경부/Kwater: 공공 인프라 사용 데이터 : 전기/상수도 사용 데이터</p> <p>※주요 민간데이터의 경우, 혁신센터 참여 기업(15개)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스트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현대카드 금융거래 정보 - 현재 상품 요청 리스트 및 거래 건수 ■ SKTKTLGT Call Log 정보 - 최근 1년간 콜 발생 건수(위치 포함), 사용자 위치 통계(지역 별 사용자 수) ■ 카카오 택시 사용 정보 - 지역 별 사용자 호출 건수 및 연결 시간 ■ 삼성 Home IoT 센서 데이터 - 수집 정보

출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2015.8.31.

강원발전연구원은 <규제프리존정책과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2016.9.9. 정책

3) 출처: <http://cei.go.kr/policy/41/detail>



메모 2016-50호)에서 규제프리존법 시행 시 “IT를 활용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산업”인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대부분 의료기기 관련 기업)과 관련하여 총 1,528.7억 원, 평균 66.5억 원 수준(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은 5년간에 걸쳐 250억 원)의 민간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과 강원도가 마련한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계획 간의 연관성과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GS와 전라남도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9.1.자 보도자료 <강원·충남·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박차>에 따르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① 농수산 벤처 창업 및 웰빙관광 산업 육성 ② 친환경 바이오화학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GS의 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개척과 상품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전라남도가 2016.8.24.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 지역특성을 감안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라는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LG CNS, GS칼텍스 등 6개의 민간투자를 포함한 총 18개 사업, 1조 959억 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위 표<3> 참고).

전라남도가 2016.8.10.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보면, 규제프리존법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주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남 에너지 산업육성 10개년 계획 수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전라남도의 사업내용 중 하나인 “전남 에너지 산업육성 10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계획(2016.1.)⁴⁾에는 ▲ 전기자동차 핵심

4) 출처: <https://goo.gl/AfZnLp>



부품 관련 산업 육성 ▲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 섬 조성 ▲ 에너지신기술 적용 산업단지 에너지절감 사업 ▲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구축 한전 에너지 신산업 실증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확인한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전라남도는 에너지 산업 등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의 경우, LG 화학과 삼성SDI 등(ESS), 효성과 LS산전 등(모터), LG산전 등(인버터), 에너지 자립섬과 관련해서는 LG CNS 등의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3> < - 지역특성을 감안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중 민간투자 관련 내용

- 에너지신산업 : 2건 492억원
 - 에너지 자립섬(LG CNS, 477억원), IoT 융합사업(누리텔레콤, 15억원)
 -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거문도(3.0MW, 조도(1.8MW)/ '16~ '18년]
 - 대규모 아파트, 공장 등에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나주시 권역)
- 화학소재 : 2건 5,155억원
 - 화학 및 바이오 소재 기반구축[GS칼텍스 (주) 바이오소재 등 10개 기업]
 - 바이오 부탄올 및 폴리머 연구설비(550억원), 광양청과 바이오패키징협회 4개사 MOA(1,335억원)
 -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250억원), 연료전지 발전사업(2,100억원) 등
- 드론(무인기)산업 : 2건 972억원
 - 제조공장 및 기반구축(주)소모홀딩스, 유콘시스템(주) 등 12개 업체
 - 인력양성 사업, 무인기 기술개발 조립 생산공장 구축, 기술개발 R&D 연구소 설립 등

출처: 전라남도 < - 지역특성을 감안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p.5.

경상북도와 강원도, 전라남도가 규제프리존법과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구상·추진 중인 사례를 종합해보았을 때,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시작과 실제 사업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삼성의 의료산업, 네이버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 LG 혹은 GS의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규제완화라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3)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선정된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포함하여
①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 계획 혹은 민간투자유치계획 ②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에 따른 사업내용과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기업 등을 앞서 제시한 실제 사례의 수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경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여 국회에서의 통과가 불투명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통과는 전제로, 이미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5)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 상 삼성의 지원대상인 기업과 관련하여(<표1> 참고) ▲ 실제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 ▲ 삼성의 지원 전후 경영지표 변화 ▲ 경영 혹은 영업 상 최근 10년 동안의 삼성과의 관계 유무 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6)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네이버에 실제 제공한 ‘민관 공공데이터’ (<표2> 참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실제 제공된 민관 공공데이터의 내용과 규모, 해당 정보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